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선택

글_ 문정기_ 광주·전남테크노파크 원장/국가과학기술위원회



1990년대 후반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산업의 뿌리를 튼실히 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술개발보다는 각종 게이트로 대변되는 일부 유사 벤처들의 그릇된 행태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짧은 영광과 긴 상처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생력이 의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우선 벤처기업은 21세기를 지탱해 가야 할 중요한 국가기반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벤처기업도 지방화해야 한다. 현재 벤처기업은 전체기업의 69.6%가 서울에 있고, 특히 IT 부문은 84.3%에 이른다. 이 수치는 지나치게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벤처가 예외일 수는 없다.

둘째,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관간 자존심·업무영역 논란·중복지원문제 등이 왜 발생했는가를 생각하면 네트워킹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네트워킹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조직간 실질적인 지원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가동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즉 각 지원기능들이 제각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실리콘밸리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벤처기업을 선택·육성해야 한다. 스위스 IMD의 1977~2000년까지의 국제화 수준 국가경쟁력 지표 중 '벤처기업이 정부 개입없이 외국업체와 협상할 수 있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우리 나라는 39~45위, 마지막 그룹에 속한다. 이제는 국가경쟁력과 괴리된 벤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본래의 미션에 충실하는 것만이 신뢰와 자생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벤처기업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아울러 건전한 기업윤리 역시 벤처기업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